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정세와 남북관계

임 수 호*

- I. 들어가며
- II. 임박한 핵무장
- III. 지정학적 지진
- IV. 전략적 경쟁
- V. 한국의 대응

요약

이번 3차 핵실험의 성공으로 북한의 핵무장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하여 핵무장을 하는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에는 지정학적 지진(geopolitical earthquake)이 초래될 것이다.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은 일거에 북한의 우위로 전환되고, 이로 인해 북한의 대남 핵 강압전략이 노골화 되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상시화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수정주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북한과 한미 연합군간 오인에 의한 핵전쟁 발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대남 확장 역지의 신뢰성을 크게 손상시켜 한국의 대응 핵무장을 자극할 것이다. 이는 다시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해 동아시아 전체가 핵 도미노의 수렁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북핵을 둘러싼 미중간 이익충돌을 기회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의 산물이다. 미국이 중동에서 아시아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안정과 동아시아의 적절한 불안정이 필요하다. 반면 중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중동의 적절한 불안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핵의 '수직적 확산'은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위협인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자산이고, 북핵의 '수평적 확산'은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위협인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자산이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수직적 확산위협과 수평적 확산위협을 동시에 최고조로 끌어올림으로써 미국의 수직적 확산 방지전략(전략적 인내)을 돌파하고 중국의 대북정책 재전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미중의 동아시아 전략경쟁과 이로 인한 북핵을 둘러싼 이익충돌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북한의 틈새전략 역시 지속될 것이다.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은 북한 핵무장의 최대 피해자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독자적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한미일 미사일방어망 참여 등 다양한 대응옵션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의 외교적, 경제적 입지상 어느 하나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군사적 대응태세를 갖추나감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여전히 6자회담이다. 비핵화의 목표를 유지하되 북핵을 동결하고 관리하는 메커니즘으로 6자회담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I 들어가며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세 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번 실험의 폭발력과 성공 여부를 두고 논란이 없지는 않지만, 대체로 성공한 실험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번 실험이 경량화 실험인 동시에 우라늄탄 실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무장(nuclear arming)의 문턱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그간 초보적 수준으로 평가되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도 이미 무기화 단계에 도달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향후 동북아와 한반도에 지정학적 지진(geopolitical earthquake)이 초래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번 핵실험을 대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 역시 강경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금융제재와 화물검색을 의무화한 대북 제재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 역시 제재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미국은 안보리 제재와 연계해서 북한의 대외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을 제재리스트에 올리는 등 독자제재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례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에 1만 3,000명의 미군과 함께 F-22 전투기, B-52 전폭기, 핵잠수함, 해병대 강습상륙함(LHD) 등을 보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대응은 더 강경하다.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서해안 해안포를 개방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한편, 육해공군과 전략 로켓군을 참가시킨 대규모 국가급 훈련으로 맞불을 놓았다. 또한 안보리 제재결의에 맞서 정전협정 및 남북한

불가침합의의 폐기를 선언했다. 한국전쟁이 휴전상태에서 교전상태로 전환됐으므로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법적, 도덕적 책임이 없다는 고강도 위협이다. 특히 ‘서울 불바다’, ‘워싱턴 불바다’를 운운하며 핵 선제타격 권리를 사용하겠다는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북한이 대남도발을 감행할 경우 원점타격, 지원세력 타격에 더해 지도부까지 타격하겠다고(decapitation strike) 공언하고 있다. 작은 불씨하나가 전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글은 이번 핵실험의 의미와 배경, 그리고 그것이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북한의 핵무장 능력 확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이번 핵실험의 의미를 분석한다. 둘째,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초래할 안보위협과 불안정을 예측한다. 셋째, 이번 핵실험이 동아시아 미중 전략 경쟁의 게임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방향을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옵션들을 검토하고, 외교적 접근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II

임박한 핵무장

이번 3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핵무기 성능 입증 성공여부, 사용한 핵물질의 종류, 경량화 성공여부, 그리고 핵무기 실전배치 능력 확보여부 등 크게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이번 실험을 통해 핵무기 성능입증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원자탄의 표준 폭발력 범위는 10~20kt 가량이다.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탄인 ‘꼬마’(Little Boy)의 경우 16kt,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탄인 ‘똥보’(Fat Man)의 경우 20kt 가량의 폭발력을 시연했다. 북한의 경우 1차 핵실험(2006.10) 때는 0.5~0.8kt, 2차 핵실험(2009.5) 때는 2~7kt의 폭발력밖에 시연하지 못해 실패 내지는 부분성공에 그친 것으로 평가됐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폭발력이 평균 16~17kt(최소 3.98kt, 최대 28.63kt)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정도 규모면 성능입증에 성공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진도별/계산방식별 폭발력 추정치

		계 산 방 식			
		Ringdal	KIGAM	CTBTO	Murphy
진도	4.9Mb	3.98kt	5.5kt	7.94kt	16.21kt
	5.1Mb	7.36kt	9.5kt	12.59kt	28.63kt

* 이번 실험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의 실험파(Mb)는 한국과 중국 4.9, CTBTO(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기구) 5.0, 미국 5.1 등 나라별로 4.9~5.1까지 다양하게 관측됐다.

* 같은 진도라도 계산방식에 따라 폭발력이 달리 평가될 수 있다. 한국 국방부의 평가인 6~7kt의 경우 진도를 4.9Mb로 보고 KIGAM 내지는 CTBTO 계산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 자료: 전성훈,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정책: 분석과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참조

둘째, 이번 실험에 사용한 핵물질이 플루토늄인가 고농축우라늄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 해명되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은 10개 안팎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약 45kg 내외)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플루토늄 생산 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핵무기를 양산하자면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북한이 최소 1,000~2,000기의 P2형 원심분리기와 ‘초현대식 제어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2010년 11월 방북한 헤커 박사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Hecker 2010). 북한이 2009년 6월부터 시험단계를 거쳐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여¹⁾ 지금까지 원심분리기를 가동했다면, 현재 북한은 핵무기 3~6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의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²⁾ 이번 실험에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했을 개연성, 즉 핵무기 양산능력을 테스트하고 과시하려 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북한 역시 핵실험 직후 ‘다중화된’ 핵 억지력을 과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조선중앙통신〉, 2013.2.12). 1, 2차 실험이 플루토늄탄 실험이었으므로 이번에는 우라늄탄을 실험해서 ‘다양한 종류(多種)’의 핵무기를 갖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1) 북한은 2009년 6월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라늄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시험단계에 들어섰다”며 “우라늄농축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2) 일반적으로 핵무기 1개를 만드는 데는 25~30kg의 고농축우라늄이 소요된다. P1형 원심분리기는 2,500개~3,000개, P2형 원심분리기는 1,000개~1,200개를 1년간 가동하면 이 정도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헤커 박사에 따르면 북한은 P2형 원심분리기를 갖고 있다. 반면 이란은 P1형 원심분리기를 갖고 있다.

부분이다.³⁾ 그러나 국제사회는 지난 2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방사능 핵종을 탐지하는데 실패했다. 따라서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핵물질을 사용했는지는 앞으로도 파악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생산능력과 이를 무기화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핵시설 공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으로 미뤄볼 때 공개시설 이외에 비밀 농축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핵무기 숫자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Albright and Walrond 2012).

셋째, 경량화에도 성공한 것으로 봐야할 듯하다. 경량화(miniaturization)란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작고 가볍게 만드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무게를 1톤 이하로 줄이면 경량화에 성공한 것으로 본다. ‘파키스탄 핵무기의 아버지’인 압둘 칸 박사는 1999년 북한에서 완성된 핵장치(nuclear device)를 직접 확인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은 늦어도 1990년대 후반에는 중량 3~4톤의 원시적인 핵장치를 완성했다고 판단된다.⁴⁾ 이후 북한은 확인된 것만도 70여 차례 이상(1997.12~2002.9) 비핵 고폭(高爆)실험을 통해 경량화 작업을 추진했다(신진 2002; 고영구 2003; Sanger 2003). 이렇게 본다면 2006년과 2009년의 핵실험은 경량화된 핵무기의 성능입증 실험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3차 핵실험 역시 경량화된 핵무기의 성능입증 실험이었고, 과거 두 차례와 달리 이번에는 성능입증에 성공함으로써 동시에 경량화에도 성공한 것으로 봐야한다(Albright 2013). 물론 이번 실험으로 핵탄두는 1톤 수준으로 경량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보다 더 작고 가볍게 만들려면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핵무기 실전배치 능력 확보여부이다. 경량화된 핵무기를 탄도 미사일(ballistic missile)에 장착하면 핵무기는 실전배치 된다. 물론 핵무기는 항공기로도 투발할 수 있지만 한미연합군이 한반도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 북한 입장에서 항공기는 믿을 수 있는 투발수단이 되지 못한다.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3) “다중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존 플루토늄 계열 이외에 우라늄 계열 핵폭탄을 가졌다는 의미라는 해석, 기존 순수 원자탄(pure nuclear fission bomb) 이외에 초보적 수소폭탄인 증폭분열탄(boosted-fission bomb)을 가졌다는 의미라는 해석, 기존 전략 핵무기 이외에 전술 핵무기도 가졌다는 의미라는 해석 등 3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두 번째 해석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이미 2010년에 두 차례에 걸쳐 비밀리에 증폭분열탄 실험을 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De Geer 2012).

4) 핵장치를 완성한 시점이 1990년대 초반이라는 증언도 있다. 핵장치 개발부서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핵화학방어국에 근무하다 탈북한 이충국에 따르면, 북한은 1993년 10월 20일 핵장치 완제품 실험에 성공했다고 한다(장준익 1999, 179).

탐재하여 실전배치 하려면 경량화에 더해 재진입 기술이 필요하다. 재진입(reentry) 기술이란 탄두가 대기권 밖에서 분리되어 대기권 안으로 진입할 때 발생하는 고열을 견디는 기술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2,000~3,0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재진입 기술, 대체로 중거리(MRBM)나 중장거리(IRBM) 탄도미사일용 재진입 기술은 갖고 있으나, 6,000~7,000도까지 고열이 발생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용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함형필 2012; 전현석 2012; 송홍근 2013). 이상의 분석에 비춰,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 시나리오를 예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탄두 탑재중량이 1~1.2톤에 달하는 중거리 노동미사일의 경우 당장 실전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Albright 2013). 노동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1,500km로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둘째, 탄두 탑재중량이 0.7~1톤인 단거리(SRBM) 화성미사일, 중장거리 무수단미사일 등은 추가 경량화 이후 실전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1~2회의 핵실험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화성미사일은 사거리가 300~600km로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무수단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4,000km로 광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셋째, 탄두 탑재중량이 0.7~1톤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은 추가 경량화 및 추가 재진입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핵실험에 더해 미사일시험발사가 필요할 전망이다. KN-08은 사거리가 10,000km 이상으로 추정되며 미 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뿐 아니라 미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북한이 ICBM을 확보하기까지 채 5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평가이다.⁵⁾

III

지정학적 지진

북한의 핵무장(nuclear arming)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심대한 불안정과 위협을

5) 로버트 게이츠 前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이 5년 내에 ICBM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 벌써 2년 전의 일이다(Harlan 2011).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⁶⁾ 첫째,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한 군사력 균형을 일거에 북한의 우위로 전환시킬 것이다. 물론 한국은 재래식 군사력에서 확실한 대북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 격차는 경제력 격차에 비례해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는 절대 무기(absolute weapon)로서 경제력에 비례하는 재래식 군사력의 불균형을 일거에 뒤집는 효과를 갖고 있다. 만일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사이의 관계에서 비핵보유국이 핵을 갖게 되면 양국의 군사력 균형은 경제력이나 재래식 군사력의 격차와 무관하게 균등화되며, 두 비핵보유국 사이의 관계에서 일국이 핵을 갖게 되면 역시 경제력이나 재래식 군사력의 격차와 무관하게 군사력 균형은 핵보유국의 우위로 전환되게 된다(Waltz 1990). 아무리 경제력과 재래식 군사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핵보유국은 핵보유국을 상대로 힘의 최종적 테스트인 전쟁에서 독자적으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전도됨에 따라 북한의 대남 핵 강압전략이 노골화 되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상시화 될 소지가 크다. 핵 강압전략(nuclear coercion strategy)은 핵무기로 인해 상대방이 충분한 보복을 가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강력한 재래식 국지도발로 상대방을 위협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시도이다. 북한의 핵 강압전략은 2차 핵실험을 전후한 시점부터 본격화되었다. 예컨대 2009년 1월 북한은 한국 정부가 <6.15 선언>과 <10.4 선언> 이행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기존 남북한간 정치, 군사적 합의를 폐기하고 서해 NLL 관련 합의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한국의 군함이나 어선이 자신들이 1999년에 임의로 설정한 서해 경계선과 통항로를 벗어나는 경우 포격을 가하겠다는 위협에 다름 아니었다. 이렇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후 북한은 4월 장거리로켓 시험발사와 5월 핵실험을 감행했다. NLL 문제나 보다 넓게는 남북한관계 전반에서 한국의 양보를 강제해 내려는 전형적인 핵 강압전략인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10년 11월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는 동시에 연평도에 포격을 퍼부었다. 연평도 포격은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노골적 선제공격이었다. 특히 한국

6)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2003년 1월에 한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동아시아에 지정학적 지진(geopolitical earthquake)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Perry 2003). 또한 그 보다 훨씬 전인 1991년 봄에 작성된 미국 <국가안보검토 28호>(National Security Review 28)는 북한의 핵무장은 주한 미군과 주일미군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고,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유인을 증가시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훼손하고, 핵시설에 대한 한국의 선제공격이나 북한의 대남 재래식도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Wit 2000).

전쟁 휴전 이후 한국 영토에 가한 최초의 포격이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전협정이 파기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대담성은 핵 억지력에 대한 자신감에 기인하는 것이며, 남북한간 전도된 군사력 균형에 한국을 적응시키려는 전략으로 봐야 한다. 북한이 이번 3차 핵실험 직후 정전협정 및 남북한 불가침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임의의 시각, 임의의 방식으로” 선제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향후 북한의 핵능력이 증가될수록 핵 강압전략은 보다 빈번하게, 보다 강도 높게 재연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경우 사소한 충돌조차 자칫 핵사용 국면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냐 항복이냐”의 딜레마 속에서 한국정부의 대응옵션이 크게 제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김희상 2009).

셋째, 북한이 핵무기를 한반도에서의 수정주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탈냉전 이후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 의사를 포기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시각과 그렇지 않다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두 시각 모두 한미 군사동맹과 미국의 대남 안보공약이 북한의 무력통일 기도를 억지한 핵심요인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O'Hanlon 1998). 따라서 북한이 충분한 핵전력을 확보한 이후 핵사용을 위협하거나 실제 사용함으로써 대남 도발 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할 수 있다고 만에 하나 오만한다면 무력통일을 시도하려는 유인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수정주의적 야망을 실현하려는 공세적 목적만이 아니라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이 임박하다고 판단할 때 예방전쟁(preventive war) 차원에서 시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Hodge 2003; Copeland 2000).

이러한 우려는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계속 지적되어 왔다. 1995년 리처드 베츠는 북한이 5개의 핵무기를 확보하고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대남 도발 시 미군개입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는데,⁷⁾ 북한은 이미 그러한 능력을 확보하기 직전단계에 도달해 있다. 또한 굳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군 개입을 저지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있다. 예컨대 도발 시 일본에

7) 베츠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대남도발 시 미군이 개입하면 한국, 일본, 미국의 도시에 각기 1-2개의 핵무기를 투하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위협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개의 핵무기를 과사용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 한반도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도 자국의 도시를 파괴당하는 손실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개입은 저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Betts 1995, 70-79).

핵탄두를 겨냥함과 동시에 한국의 심리적 무장해제를 위해 무인도와 같은 고립된 지역에 전술 핵무기를 투하하는 등 적절히 핵전력을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한국 내에서 전쟁종결론을 불러 일으키고, 미일간의 갈등과 미국 내부의 분열을 초래해 미국의 전력증강 시간을 상당기간 늦출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장악하거나 서울을 장악 하여 유리한 고지에서 평화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성훈 2005, 10; 한용섭 2007, 14-16; Cha 2002, 224).

넷째, 북한과 한미연합군간 오인에 의한 핵전쟁 가능성이 발생한다. 핵전쟁은 공멸을 의미하므로 쌍방 모두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미치지 않고서는” 핵 전쟁을 도발할 수 없다는 것이 핵 억지(nuclear deterrence)의 기본논리이다. 그러나 이는 완벽한 합리성의 세계에서만 작동하는 가설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합리성을 제약 하는 요인들로 인해 핵 억지의 기본논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Steinbruner 1983; Jervis 1976; Jervis 1989, ch.5).

예컨대 긴박한 상황에서 정보실패로 인해 상대방이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자는 유혹이 앞서게 된다. 재래식 군사력의 세계라면 이러한 경솔한 도발의 유인은 높지 않다. 재래식공격은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 미사일은 방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미사일이 지상 발사대를 떠나기 전에 먼저 공격해서 핵탄두를 최대한 파괴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적은 파괴되지 않은 핵탄두로 보복을 할 것이고 아측 역시 재보복을 가함으로써 결과는 상호파멸로 귀결될 소지가 크다. 그러나 상대방의 선제공격이 임박했다고 확신하는 경우, 파멸의 위험 때문에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불합리하고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선제공격으로 상대방의 핵능력을 최대한 파괴하는 것이 나의 피해정도를 낮추는 최선의 선택이 된다. 요컨대 중대한 오인이 발생하는 경우 핵무기의 존재는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전쟁을 자극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⁸⁾

8) 세이건에 따르면,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 간에는 150회의 우발적 핵전쟁 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원인도 다양해서 단순 기계오류나 조작오류에서부터 시작해서, 통신오류, 상대방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핵미사일 공격으로 오인한 경우, 심지어 경보위성이 강력한 태양광선을 적의 핵미사일로 오인해서 조기경보를 발동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세이건의 결론은 냉전시기 인류가 핵 공멸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는 것이다(Sagan 1993).

다섯째, 미국의 대남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 핵우산(nuclear umbrella)의 신뢰성에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대남 확장억지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것으로, 한미 군사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확장억지의 핵심이 바로 핵우산이다.⁹⁾ 문제는 확장억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자 그대로 ‘약속’일 뿐이어서 유사 시 미국의 개입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는 확장억지가 근거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1953.4) 자체의 약점과 관련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유사 시 미국의 자동개입이 보장된 NATO 조약과 달리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개입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군사개입의 조건으로 의회의 선전 포고, 성문화된 특별권한, 자위권 발동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유사시 확장억지가 실제 가동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적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미국 국민들과 의원들이 미군의 개입을 반대하는 경우 확장억지의 실제 제공은 거부될 수 있으며, 개입이 결정되더라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전호원 2008, 32-39).

이러한 문제는 북한이 미국의 주요한 가치나 미국 본토를 핵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다 심각해진다. 예컨대 북한이 남침을 시작하면서 미군이 개입하는 경우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괌 미군기지, 하와이 미군기지, 나아가 미국 본토의 도시들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과연 미국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비해 일본과 자국의 도시가 미국에게는 훨씬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전 세계에 걸친 미국의 안보공약의 신뢰성에 치명적 손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개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임수호 2007b).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국내정치 때문에 개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데 있다.

9) 미국의 대남 확장억지 공약은 1978년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핵우산의 이름으로 처음 제공된 이래 매년 재확인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에 열린 2006년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라는 개념이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미국의 대남 확장억지 공약은 2009년 6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보다 높은 급에서 재확인되었고, 같은 해 10월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확장억지의 수단으로 핵무기,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망이 처음으로 명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응 핵무장 유인을 증가시켜 한국의 대외관계를 악화시키는 물론 동아시아 전반에 지정학적 불안정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주지하듯이 한국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당시 독자적 핵무장 노선을 채택한 경험이 있다. 또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핵무장 옵션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는 경우 비핵화공동선언 폐기론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의 파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핵무장을 선택할 개연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에게 존망의 위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여론 및 정부의 선택이 이른바 ‘합리적 계산’을 넘어서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실제 핵무장 노선을 채택하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한미, 한일, 한중관계를 포함한 한국의 외교이익은 심각하게 침해될 공산이 크다.

한편 북한의 핵무장은 일본에게도 핵무장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발생한 이래 일본 내에서는 “북한이 가면, 우리도 간다(going nuclear)”는 식의 핵강경론자들의 주장이 강화되어 왔다(Emmott 2004; Sherrill 2001). 물론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핵관념이 확고하여 핵 강경론자들의 주장은 아직까지는 정치적으로 힘을 얻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본은 미사일방어망과 같은 보조적 대응수단에 의존할 수 있고, 핵무장이 진짜 불가피해졌을 경우 단기간 내에 수백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단지 북한의 핵위협 때문에 미일동맹의 파기를 의미하는 핵무장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박한규 2002; Amano 2002; Jimbo 2002).

그러나 북한이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하고 미사일 방어망으로 대처가 불가능할 정도로 핵미사일의 숫자를 늘려가는 경우 일본의 여론 지형도 지금과는 사뭇 달라질 것이다. 2012년 6월 20일 일본 의회가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해 “원자력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신성택 2012). 특히 북한으로 인해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거나 그러한 의혹이 발생하는 경우 일본의 핵무장은 기정사실화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은 역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계심을 고취시킬 것이고, 이는 다시 대만을 자극해 결국 동아시아가 빠져나오기 힘든 안보 딜레마, ‘핵 도미노’(nuclear

domino)의 미궁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Perry 2003; Peron-Doise 2005; Hughes 2007).¹⁰⁾

IV

전략적 경쟁

북한의 2차 핵실험(2009.5) 직후인 2009년 7월 중국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분리하는 정책전환을 선택한 바 있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9). 북한이 이미 비핵화의 마지노선을 넘어섰다고 보고, 당장 비핵화보다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면서, 한편으로는 6자회담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 차원의 적극적인 대북 관여정책을 통해 북핵문제를 관리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북한을 자국의 경제적 영향권 아래 편입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북한을 개혁·개방시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었다. 이후 중국 대북정책의 1순위와 2순위는 각기 전쟁방지(無戰)와 정권안정화(無亂)가 차지했고, 비핵화(無核)는 기껏해야 3순위로 밀려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이렇게 본다면 최근 중국이 강력한 금융제재와 화물검색조치를 담고 있는 안보리 제재결의 2087호(2013.1.22)와 2094호(2013.3.7)에 동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비춰진다. 특히 중국은 관계기관들에게 제재결의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고, 이 지침에 따라 무역이나 금융거래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차대운 2013).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 김정은 지도부의 핵을 이용한 극한 전술에 대한 반발로 북한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고 공개 발언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강의영 2013).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북한 핵문제가 가하는 지정학적 부담보다 북한이라는 ‘버퍼 존’(buffer zone)이 주는 지정학적 가치가 여전히 더 크기 때문이다.

10) 물론 동아시아 핵 도미노는 기우일 뿐이라는 지적도 많다(Lee 2008; Bergens 2010; Procida 2010).

특히 중국 지도부 내의 미묘한 세력균형을 감안할 때 2009년 대북정책 전환의 주역인 시진핑 주석이 스스로 정책 재전환을 선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 재검토”나 “북중동맹 파기,” 심지어 “한국주도 통일”과 같은 발언들은 외교적 수사로 치부되고 있다.¹¹⁾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 가능성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설전은 중국 당국 스스로가 부채질하고 있는 면이 있다. 예컨대 핵실험 직전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안보와 생존을 위해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이 “안보리제재 2087호에 대응해 또 다시 핵실험을 해도 놀라울 게 없다”며 “미국이 동맹국, 특히 한국의 안보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북중관계 이간질에 활용하려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추진 역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보냈다(Editor 2013b).

반면 바로 다음날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경우 “한·미·일이 바라는 만큼 북한을 강하게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북한이 커다란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한·미·일이 북중간 불화를 피하고 있다고 믿는 모양인데,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함정을 피하기 위해 북한의 극단적 행동에 인질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인민일보〉의 사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북중관계가 파기되면 북한이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며 “중국은 (북중관계 단절로 인한) 지정학적 손실을 다른 방법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다(Editor 2013a). 북한이 계속 중국의 말을 무시하고 위기를 조장한다면 한국주도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는 경고인 것이다.

어떤 시각이 더 현실에 부합하는 것일까? 아마도 현실은 전자와 후자의 중간지점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처럼 “너무 과도한 제재는 안 되므로 적당히 제재하자”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제재결의 2094호를 살펴보면 ‘적당히’보다는 ‘이중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듯하다. 왜냐하면 강력한 금융제재와 김빠진 화물검색조치가 병존하는 것이 이번 결의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와 달라진 중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인 듯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1) 3차 핵실험 직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의 당위원 부편집주간이 미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주장을 담은 글을 기고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Deng 2013).

이번 제재결의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¹²⁾ 첫째,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금융서비스 및 모든 금융/비금융 자산의 대북이전을 금지하고, 필요하다면 자국 내 금융/비금융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되는 대북 무역업체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수출신용/보증/보험)을 금지시켰다. 이 두 가지 사항은 기존에는 촉구사항(call upon)이었던 것을 의무사항(decide)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국 내 북한은행 개설, 자국 금융기관의 북한은행과의 합작/지분투자/코레스관계 설정, 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지사/계좌 개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촉구사항을 추가했다.

둘째, 화물검색을 일부 강화했다. 선박의 경우 금지품목이 선적돼 있다고 판단되면, 자국 관할권 내에 있거나 경유하고 있는 모든 북한발/북한향 화물, 북한이나 대리인이 중개한 화물을 검색하도록 했다. 이 조치 역시 기존에는 촉구사항이었던 것을 경유화물과 중개화물을 추가해서 새로 의무사항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또한 검색에 불응하는 선박은 입항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새롭게 도입하고 의무화했다. 한편 항공기의 경우 금지품목이 선적돼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착륙/이륙/경유를 금지토록 하는 조치를 새로 추가했다. 그러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촉구사항이다.

셋째, 대북 거래금지 품목을 추가했다. 거래금지 리스트에¹³⁾ 8개 품목(핵관련 2개, 미사일 관련 5개, 화학무기 관련 1개)을 추가하고 관련 품목의 중개(brokering)도 금지시켰다. 이 역시 의무사항이다. 한편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국들이 자율적으로 모든 품목의 대북거래를 차단하도록 촉구했다. 이는 제재결의 2087호에서 강조사항(underline)으로 처음 도입된 자율적 수출통제(catch-all 통제) 조치를 촉구사항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기존 자산동결 대상에 단체 2곳을 추가하고(총 19곳), 자산동결 및 입국금지 대상에 개인 3명을 추가(총 12명)했다. 이는 의무사항이다. 또한 북한 외교관들이 불법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는 새롭게 도입된 촉구사항이다.

12) 원문은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S/RES/2094\(2013\)](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S/RES/2094(2013))>.

13) 대북 제재결의 1718호(2006.10) 및 1874호(2009.6)에 의해 1) 모든 재래식무기(소형무기 제외), 2) 핵/탄도미사일 관련 품목, 3) 여타 대북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품목, 4) 관련 금융거래/기술훈련/자문/용역/지원의 대북이전이 금지되어 있다.

이번 제재결의의 핵심은 금융제재와 화물검색조치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금융제재 조항의 경우 <환구시보>가 말한 북한이 치러야 할 ‘커다란 대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만일 규정대로 이행만 된다면 북한은 자금줄이 막히는 “목줄을 조여 오는”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요구한 금융제재 의무화에 동의함으로써 결의를 위반한 자국 금융기관들에 대해 미국이 2차 제재(secondary boycott)를 가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현재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는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중국 금융기관들은 2차 제재에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이 금융제재 의무화에 동의한 것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족쇄를 채운 것이고, 그만큼 대북제재 의지가 단호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화물검색 조치는 정반대이다. 물론 일부 조치가 강화되기는 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있다. 예컨대 이번 제재결의에는 1874호에 포함됐던 공해상 화물 검색 조항이 빠져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북한 항공기의 이착륙 및 경유 금지조항의 경우 미국이 마련한 초안에서는 의무사항이었으나 실제 결의안에서는 구속력 없는 촉구사항으로 변경되었다. 중국은 이 두 가지 변경을 통해 미국이 추진했던 화물검색 강화를 ‘물타기’ 해버린 것이다. 북한의 對중동 무기거래의 대부분이 중국을 경유하여 항공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중동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중국이 방치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번 제재결의를 통해 북한과 미국 모두에 대해 강력한 압박카드를 손에 쥐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 태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선언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미중간 전략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주지하듯이 ‘아시아 회귀’(Return to Asia),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등으로 불리는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 정책은 중국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정책은 클린턴 행정부 말기 내지는 부시 행정부 초기에 구상된 것이지만, 2002년 9.11 테러로 미국의 관심이 중동에 집중되고 반테러전쟁에 대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해지면서 추진이 지연되다가 반테러전쟁이 마무리되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영향력 팽창이 가속화되자 ‘아시아 회귀’라는 이름으로 재가동된 것이다(장달중·임수호 2004; Clinton 2011; Manyin et.al. 2012).

현재 동아시아 미중 전략경쟁의 주요무대는 동남아와 동북아다.¹⁴⁾ 미국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군사동맹을 일신하는 한편, 호주, 일본, 한국, 대만 등 전통적 동맹국과의 군사동맹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한국-일본-대만-호주-동남아-인도를 잇는 거대한 對중국 봉쇄선 구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군력 및 방공력 증강, 항공모함 킬러인 ‘동풍 21-D’ 실전배치 등 반접근/영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 전략을 통해 봉쇄선을 밀어내면서 영향권을 확대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또한 북한, 미얀마, 파키스탄 등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탈출구를 확보하고자 시도하고 있다(남문희 2012; Pilling 2011).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기 갈등을 빚은 한미동맹과 일본 민주당 정부 등장 이후 느슨해진 미일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이를 연계해 한미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동아시아 미사일방어망(Missile Defense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보고 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0, 32-33). 따라서 중일간 ‘적절한’ 영토갈등과 함께 북한의 ‘적절한’ 핵/미사일 위협은 그 자체로만 보면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불안정 요소이지만 미중 전략경쟁과 아시아 재균형이라는 보다 큰 게임구조에서 보면 전략적 자원(strategic resource)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이러한 필요성의 산물이다.¹⁵⁾ 즉 전략적 인내의 이름아래 북핵문제를 의도적으로 방치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한미, 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동아시아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위한 정치외교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동결하고 ‘관리’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對중국 견제를 우회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것이 2009년 7월 중국 지도

14) 오늘날 미중 전략경쟁은 과거 미소냉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립 일변도였던 미소냉전과 달리 미중 전략경쟁은 갈등과 협력의 요소를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국간 높은 경제적, 금융적 상호의존성은 냉전의 재도래를 상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미중의 상대방에 대한 견제정책은 갈등과 협력, 균형(balancing)과 통합(integration)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 헤징(hedging) 전략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미국의 對중국 헤징전략은 중국에 대한 봉쇄(containment)와 관여(engagement)를 절충적으로 배합했던 클린턴 행정부 말기의 봉쇄-관여정책(con-gagement policy)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최근 협력보다 갈등, 관여보다 봉쇄의 요소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Medeiros 2005/2006; Atanassova-Cornelis 2011; Shambaugh 1996).

15)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비핵화에서 먼저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도발이나 유화 제스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정책 스탠스를 의미한다.

부가 대북정책 전환을 결정한 배경이고, 또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관련국의 냉정과 자제”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것이 북한 핵능력의 ‘수직적 확산’(핵개발, vertical proliferation)을 둘러싼 미중간 전략경쟁이라면, 2010년 말부터는 ‘수평적 확산’(핵의 외부확산, horizontal proliferation)이라는 또 다른 차원이 추가되었다. 2010년 11월 북한은 우라늄농축시설을 외부에 공개했는데, 이는 이미 노후화로 가동이 중단된 플루토늄 프로그램 이외에 새로운 핵개발 루트를 확보했음을 의미했다. 플루토늄 핵시설에 비해 우라늄농축시설은 규모가 작고 여러 곳에 분산시켜 가동할 수 있어 외부에서 추적이 불가능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더 큰 문제는 북한의 對이란 핵확산 가능성이었다.

북한과 이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탄도미사일 개발부문에서 협력을 진행해왔다. 이란의 주력 미사일 중 하나인 샤하브-3(Shahab-3)는 외관만 바꾼 노동미사일로 알려져 있다(전성훈 2010). 또한 양국은 핵문제에서도 오랜 기간 협력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간 북한의 핵실험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란 과학기술자들이 참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남혁상 2013). 그런데 북한의 주력 핵 프로그램은 플루토늄 프로그램이고 이란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이어서 양자간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은 북한보다 이란이 훨씬 앞선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그런데 2010년 11월 북한이 “어안이 병병해질 정도의 초현대식”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함으로써(Hecker 2010) 이러한 평가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이란은 나탄즈를 비롯한 농축시설에 1만기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지만 원심분리기가 구형(P1)이라 효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북한이 공개한 원심분리기는 그보다 효율이 훨씬(최소한 4배 이상) 높은 P2형이었다(Albright and Walrond 2011; Albright and Walrond 2012). 따라서 미국은 P2형 원심분리기 설계도와 견본을 이란에 판매할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나아가 이번 3차 핵실험으로 또 다른 문제가 추가됐다. 이번 실험은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성공한 실험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장치와 그 동안의 실험 데이터를 이란에 판매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남문희 2013). 핵실험 직후 존 캐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실험은 북한만의 문제도,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문제만도 아니다. 이것은 확산의 문제이며 이란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Kerry 2013).

미국이 중동에서 아시아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안정과 동아시아의 적절한 불안정이 필요하다. 반면 중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중동의 적절한 불안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핵의 ‘수직적 확산’은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위협인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자산이다. 역으로 북핵의 ‘수평적 확산’은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위협인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자산이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수평적 확산을 차단한 가운데, 수직적 확산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전개됐으며(‘전략적 인내’), 중국의 대북 정책은 수직적 확산을 동결하는 가운데(6자회담과 포괄적 관여), 수평적 확산은 방치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¹⁶⁾ 이번 안보리 제재결의는 북핵을 둘러싼 미중간 이익충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중국의 대북정책은 변할 것인가? 중국은 북핵의 수직적 확산에 대해 매우 강력한 채찍을 들이댈 것이다. 그러나 수평적 확산에 대해서는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한 방치전략을 바꿀 이유가 없다. 미국의 대북 전략적 인내는 바뀔 것인가? 전략적 인내는 핵의 수평적 확산을 차단한 가운데, 수직적 확산이 지역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對중국 견제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반확산 전략(counter-proliferation strategy)이다.¹⁷⁾ 미국은 북한이 수평적 확산을 하지 않는 대가로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할 것이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 구도가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의 수직적 확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해법을 추진할 이유는 없다. 최근 미국 오피니언 리더그룹에서 ‘핵보유국 북한과의 동거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나(Alagappa 2013; Carpenter 2013), 북한 핵실험에 대한 미국 고위관리들의 발언에서 비핵화(denuclearization)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defense)와 수평적 확산방지에 대한 언급만 등장

16) 중국의 대량살상무기 외부확산 의혹과 특히 이란-중국-북한 커넥션에 대해서는 Kan(2013), Cho(2011).

17) 반확산 전략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구상되었으나 부시 행정부에서 본격 추진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이다. 협상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저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관련 기술이나 물질의 외부 이전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위협은 미사일방어망이나 선제공격능력 강화와 같은 군사적 억지력 증강을 통해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물론 협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비협력성을 공개 입증함으로써 ‘차별을 위한 국제연대’ 형성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임수호 2007a, 257-261).

하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¹⁸⁾

이번 3차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의 이익충돌과 미중 전략경쟁의 규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아마 북한 역시 이 점을 노렸을 것이다. 수직적 확산에 대한 미국의 방치(전략적 인내)는 북한으로서는 핵카드의 상실을 의미했다. 2012년 12월 로켓발사를 전후한 시점부터 중국이 보여 온 수직적 확산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외교적 고립을 의미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3차 핵실험을 통해 수직적 확산 위협과 수평적 확산위협을 동시에 최고조로 끌어올림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 움직임을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다.¹⁹⁾ 물론 북한의 전략이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아시아에서 미중간 전략경쟁이 존재하는 한 북핵을 둘러싼 양국의 이익충돌을 파고들려는 북한의 전략 역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V 한국의 대응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중국에게는 전략적 위협과 전략적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북핵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도 이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6자회담 당사국 중 북한 핵무장의 최대 피해자이자 오직 피해만 보는 유일한 행위자이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8) 예컨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2013.2.12)과 케리 국무장관의 발언(2013.2.13)의 발언을 들 수 있다(Obama 2013; Kerry 2013).

19) 이번 북한의 정전협정 및 불가침합의 파기위협은 대남카드, 대미카드의 성격도 있지만, 대중카드로서의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보인다. 로켓발사(2012.12) → 제재결의 2087호 → 3차 핵실험 → 제재결의 2094호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중국의 꺼내든 대북채찍에 대한 항의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정전협정과 불가침합의가 파기되면 한국전쟁은 정전상태에서 교전상태로 전환된다. 교전 발생 시 중국은 <북중우호조약>(1961)에 따라 교전에 자동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전은 북한이 도발한 것이지만, 전쟁, 즉 아직 진행 중인 한국전쟁은 미국의 침공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중국의 공식입장이기 때문이다. 2010년 10월 시진핑 당시 부주석이 한국전쟁 참전을 “정의로운 항미원조전쟁”이라고 발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이 발언은 국내 청중을 겨냥한 레토릭일 수 있다. 그러나 교전상황이 상시화 됐음에도 중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시아 인접국들에 대한 안보공약 역시 신뢰성이 손상돼 결국 중국의 영향력 약화로 귀결된다. 이번 정전협정 파기위협은 중국에게 불개입과 동아시아 영향력 유지 사이의 딜레마를 불러일으켜 대북 강경정책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인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독자적 핵무장, 확장억지 강화, 그리고 재래식 억지력 강화 등의 대응옵션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재래식 억지력은 아무리 강화되어도 핵무기라는 절대무기에 대한 억지력이 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북한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보조수단 이상의 의미는 없다.

독자적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능력이 커질수록 미국의 대남 확장억지의 신뢰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야 과거 미국과 소련 사이에 그랬던 것처럼 상호견제 하에서 핵군축 협상을 벌여 궁극적으로 남과 북 모두의 비핵화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김대중 2011a; 김대중 2011b).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아직은 한국사회에서 소수 의견으로 남아 있다. 핵무장은 곧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을 의미하며, 이는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 자살’을 불러올 것이므로 핵무장은 한국의 전반적 국가이익 차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손해라는 게 다수 견해이다.

물론 정부의 對중국, 對미국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사회에서 핵무장론이 적절하게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확산되면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한 중국이 북한에게 핵 포기 압력을 강화할 것이며, 미국 역시 한국의 핵무장 동기를 억제하기 위해 핵우산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맹국에 대한 결박외교(tethering diplomacy)는 한미관계, 한중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켜 원자력발전 등 평화적 핵 활동까지 제약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미국의 대남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된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를 더 연기하고, 미국의 대남 방어공약의 약화로 비취질 수도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대한 논의를 철회하여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특히 필요하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 역시 핵무기로 보복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제안이다(Mcdevitt 2011). 그러나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 및 이와 관련된 전시작전권 이양, 그리고 핵 보복 관련 모호성 유지 등 자신의 글로벌 군사전략과 관련된 정책을 북한 때문에 변경할

개연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한편 1991년 철수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여 핵우산을 강화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05년 2월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일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²⁰⁾ 2010년 11월 북한의 우라늄농축 시설이 공개된 이후에는 김태영 국방장관이 “검토해 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던 사항이다. 물론 이 발언이 나간 직후 한국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한미양국은 이 문제를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 대상도 아니다”며 부인했지만(Hwang 2011), 그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2010년 4월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Nuclear Posture Review)는 “위기의 순간에 필요하다면 동아시아에 비전략체계(non-strategic systems)를 재배치할 능력을 유지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0, 33). 이 문장은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며, 비전략체계는 전술핵무기를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조차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소수 의견으로 남아 있다(Hwang 2011). 지금이 <핵태세검토보고>에서 말한 ‘위기’ 상황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지금도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북한 때문에, 중국 및 러시아와의 신냉전을 초래할지도 모를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동의할 개연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미국의 대남 확장역지 강화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남는 대안은 미사일방어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미사일방어망은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군사적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2월 미 국방부는 <탄도 미사일방어계획검토보고>(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에서 동아시아에서 일본, 호주와 함께 한국을 미사일방어망의 파트너로 적시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0, 32-33). 한국 역시 미사일방어능력 획득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조건들이 필요한지를

20) 주한미군 전술핵무기를 재도입하여 ‘핵 인계철선’(nuclear trap-wire)을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에 ‘소규모 상호확증파괴 상황’(mini-MAD)을 조성하자는 제안이다(Parker 2005).

결정한 후 미사일방어망 강화를 위해 한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미사일방어망에 참가하게 되면 한국의 국방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여론 및 한국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나아가 중국이 이를 한·미·일에 의한 對중국 봉쇄망으로 보고 반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북 억지력 제고와 한중관계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동시에 잡을 것인가가 향후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을 테스트 하는 첫 번째 무대가 될 전망이다.

요컨대, 북한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옵션들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고 중국 등 관련국들과도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군사적 대응태세를 갖춰나감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와 관련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담이다.

물론 이것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시킬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은 아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이고, 남아공을 제외하면 자기가 개발한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한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6자회담 무용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6자회담은 비록 비핵화를 목표로 출발한 것이지만,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핵능력이 더 향상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장치로 그 기능이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응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능력 증가를 제어하고 위협을 관리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이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의영, “오바마, “중국, 북한 정책 재검토 조짐 보여,” <연합뉴스>, 2013.3.14.
- 고영구, 국회 정보위원회 증언(7월 9일), <조선일보>, 2003.7.10.
- 김대중, “南이 核 가져야 北이 협상한다,” <조선일보>, 2011a.1.11 .
- 김대중, “한국의 핵무기, 논의할 가치도 없다는 말인가,” <조선일보>, 2011b.2.8.
- 김희상, “오늘 한국의 안보위협,” KINSA Academy 강의, 2009, <<http://kinsakorea.tistory.com/1>>.
- 남문희, “아시아 신냉전, 한국이 최전선이다,” <시사IN>, 2012.6.25.
- 남문희, “북한 핵 확산될까? 미국은 초조하다,” <시사IN>, 2013.3.11.
- 남혁상, “‘北·이란 패키지 제재’ 주장 급부상,” <국민일보>, 2013.2.19.
- 송홍근, “한국도 고체연료로는 은하3호급 로켓 개발 가능,” <신동아> (1월호).
- 박한규, “일본의 핵선택: 관념, 제도, 그리고 안보정책,” 『국가전략』, 2012.
- 신 건, 국회 정보위원회 증언(10월 24일), <조선일보>, 2002.10.28.
- 신성택, “핵무장 넘보는 일본의 핵능력,”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25, 2012.
- 임수호,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 북한의 핵정책과 위기조성외교(1989~2006),”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a.
- 임수호, “불량국가와 확장억지의 실패?: 북한 핵정책에 관한 공격적 군사목적설 재검토,” 『한국 정치연구』, 16(1), 2007b.
- 장달중·임수호, “부시행정부의 패권전략과 동아시아의 안보딜레마,” 『국가전략』, 10(2), 2004.
- 장준익, 『북한 핵·미사일 전쟁』, 서문당, 1999.
- 전성훈, “북한의 핵능력과 핵위협 분석,” 『국가전략』, 2005
- 전성훈,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공개: 그 의미와 교훈,”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0-42, 2010.
- 전성훈,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정책: 분석과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3-08, 2013.
- 전현석, “[북 장거리 로켓 발사] 北. 핵탄두 소형화대기권 재진입 기술 남아,” <조선일보>, 2012.12.13.
- 전호환,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에 대한 역사적 조명,” 『국방정책연구』, 24(2), 2008.
- 차대운, “중국, 북한 은행 자국 내 ‘불법 영업’ 금지,” <연합뉴스>, 2013.3.19.
- 한용섭, “미국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북한의 핵위협 해소 방안,” 『국방연구』, 50(2), 2007.
- 함형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의도 및 기술능력 분석,”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12. 4.13.
- Alagappa, Muthiah, "North Korean Nuclear Test: Implications for Asian Security," PacNet #10, February 13, 2013.

- _____, <<http://csis.org/publication/pacnet-10-north-korean-nuclear-test-implications-asian-security>>.
- Albright, David and Christina Walrond, "Iran's Advanced Centrifuges," ISIS Report, October 18, 2011, <<http://isis-online.org/isis-reports/detail/irans-advanced-centrifuges>>.
- Albright, David and Christina Walrond, "North Korea's Estimated Stocks of Plutonium and Weapon-Grade Uranium," ISIS Report August 16, 2012, <<http://isis-online.org/isis-reports/detail/north-koreas-estimated-stocks-of-plutonium-and-weapon-grade-uranium>>.
- Albright, David, "North Korean Miniaturization," *38 North*, February 13, 2013 <<http://38north.org/2013/02/albright021313>>.
- Amano, Yukiya, "A Japanese View on Nuclear Disarmament," *Nonproliferation Review*, Spring, 2002.
- Atanassova-Cornelis, Elena, "Reshaping the East Asian Security Order: US-China Hedging and the EU's Strategic Choices," *Ritsumeikan International Affairs*, 10, 2011.
- Bergenas, Johan, "The Nuclear Domino Myth," *Foreign Affairs*, August 31, 2010.
- Betts, Richard, "What Will It Take to Deter the United States?," *Parameters* (Winter), 1995.
- Carpenter, Ted, "Learn to live with a nuclear North Korea," *Washington Post*, February 12, 2013.
- Cha, Victor,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dges, Shields, or Sword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7(2), 2002.
- Cho, Namhoon, "North Korea-Iran Connection in WMD Proliferation," paper presented at The 8th Korea-Middle East Cooperation Forum, October 13-14, 2011.
- Clinton, Hillary,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189, 2011.
- Copeland, Dale, *The Origins of Major War* (Cornell U.P.), 2000.
- De Geer, Lars-Erik, "Radionuclide Evidence for Low-Yield Nuclear Testing in North Korea in April/May 2010," *Science & Global Security*, 20(1), 2012.
- Deng, Yuwen, "China should abandon North Korea," *Financial Times*, February 27, 2013.
- Editor, "China should not fear NK disputes," *Global Times*, February 6, 2013a.
- Editor, "Promoting peace on Korean Peninsula," *People's Daily*, February 5, 2013b.
- Emmott, Bill, "Japan's English Lessons," *Foreign Policy*, January/February, 2004.
- Harlan, Chico, "North Korea has completed missile facility, satellite imagery shows," *Washington Post*, February 16, 2011.
- Hecker, Siegfried, "A Return Trip to 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Complex," , November 20, 2010.

- <http://www.ncnk.org/resources/publications/HeckerYongbyonfin.doc/file_view>.
- Hodge, Homer,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Parameters*, Spring, 2003.
- Hughes, Christoph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mplications for the Nuclear Ambitions of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Asia Policy*, 3, 2007.
- Hwang, Doo-hyong, "U.S. not to redeploy tactical nukes in S. Korea: expert," *Yonhap News*, December 27, 2011.
- International Crisis Group, "Shades of Red: China's Debate over North Korea," Asia Report No. 179, November 2, 2009.
-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U.P.), 1997.
- Jervis, Robert, *The Meaning of the Nuclear Revolution: Statecraft and the Prospect of Armageddon* (Cornell U.P.), 1989.
- Jimbo, Ken, "A Japanese Perspective on Missile Defense and Strategic Coordination," *Nonproliferation Review* (Summer), 2002.
- Kan, Shirley, "China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s: Policy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11, 2013.
- Kerry, John(2013), "Remarks With Jordanian Foreign Minister Nasser Judeh After Their Meeting", February 13, 2013.
<<http://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3/02/204560.htm>>
- Lee, Dong Sun, "A Nuclear North Korea and the Stability of East Asia: a tsunami on the horizon?,"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61(4), 2008.
- Manyin, Mark et.al., "Pivot to the Pacific?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Toward Asia,"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28, 2012.
- McDevitt, Michael, "Deterring North Korean Provocations," *Brookings Northeast Asia Commentary*, 46, 2011.
- Medeiros, Evan, "Strategic Hedging and the Future of Asia-Pacific Stability," *The Washington Quarterly*, 29(1), 2005/2006.
- Obama, Barack,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North Korean announcement of nuclear test," February 12, 2013.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2/12/statement-president-north-korean-announcement-nuclear-test>>.
- O'Hanlon, Michael, "Stopping a North Korean Invasions: Why Defending South is Easier Than the Pentagon Thinks," *International Security*, 22(4).
- Parker, John(2005), "Restore U.S. Nukes to South Korea," Nautilus Institute PFO 05-21A, March 3, 1998.

- Perry, William,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mplication for U.S. Policy in Northeast Asia," Brookings Leadership Forum, January 24, 2003
<http://iis-db.stanford.edu/evnts/3980/perry_korea.pdf>
- Pilling, David, "China's spreading core interests," *Financial Times*, September 13, 2011.
- Procida, Frank, "Nuclear Dominoes: Real or Imagined?,"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23(3), 2010.
- Sagan, Scott, *The Limits of Safety: Organizations, Accidents, and Nuclear Weapons* (Princeton U.P.), 1993.
- Sanger, David, "CIA said to find North Korean nuclear advances," *New York Times*, July 1, 2003.
- Shambaugh, David, "Containment or Engagement of China?: Calculating Beijing's Responses," *International Security*, 21(2), 1996.
- Sherrill, Clifton, "The Need for a Japanese Nuclear Deterrent," *Comparative Strategy*, 20, 2001.
- Steinbruner, John, "Beyond Rational Deterrence: The Struggle for New Conception," *Klaus Knorr ed., Power, Strategy, and Security* (Princeton U.P.), 1983.
-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April), 2010.
- U.S. Department of Defense,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2010.
- Waltz, Kenneth, "Nuclear Myths and Political Reali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3), 1990.
- Wit, Joel, "Clinton and North Korea: Past, Present and Future," Nautilus Institute Policy Forum Online 00-02A, March 1, 2000.